

주요 내용

IMF 2년의 평가와 정책 과제

□ 지난 2년간의 성과

- (외환 위기 극복) 외채 감소 및 외채 구조의 건전성 향상, 외환 보유고 증대 등으로 대외 신인도가 제고됨
- (경기 회복 국면 진입) 경제성장률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%대로 올라섰고, 산업 생산이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가동률도 크게 상승함
- (구조조정 진행) 금융·기업·노동·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어, 금융 시스템 안정 및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

□ 문제점

- (성장 잠재력 약화) 98년 40% 가까이 감소했던 설비 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,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성장 기반의 약화를 초래
- (사회 통합력 약화) 실업자 수는 100만 명대로 감소했지만 실업률이 4.8%로 높은 수준에 있고, 취업자 증가도 임시직이 주도하고 있어 고용 불안이나 계층간 소득 격차가 여전함
- (국가 채무 증대)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국가 채무가 GDP의 23%대로 증가함으로써 향후 재정 정책·운용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
- (금융시장 안정 미흡) 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추가적 자금 대출이나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음

□ 정책 과제

- (불확실성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화) 실물 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융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 및 금리 하향 안정화 노력 지속
- (구조조정 추진 방식 개선) 경기 회복과 조화롭게 추진되고 민간 자원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
- (고용 불안 해소 및 중산층 강화) 직업 훈련 체계·직업 안전망 확충,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, 공평 과세를 위한 조세 체계의 개혁 등 필요

IMF 2년의 평가와 정책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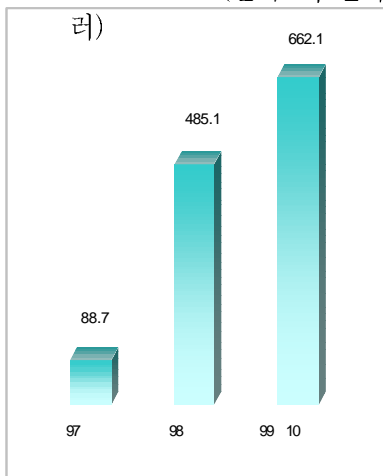
박 병 칠

지난 2년간의 성과

- 급박한 외환 위기 극복과 대외 신인도 개선
 - 가용 외환보유고 증가: 97년 11월 26일 33억 달러에서 99년 10월 말 현재 662.1억 달러로 증가
 - 외채 구조 건전화: 총외채 규모의 축소와 함께 단기외채 비중도 97년 말 39.9%에서 99년 9월 말에는 24.8%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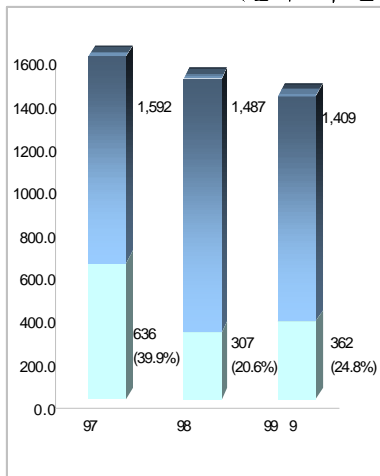
< 가용외환보유고 >

(단위: 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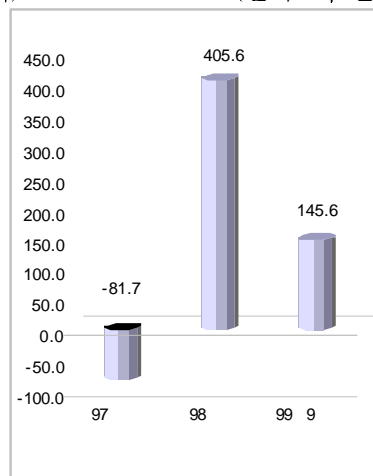
< 총외채 및 단기외채 >

(단위: 억 달러)



< 경상수지 >

(단위: 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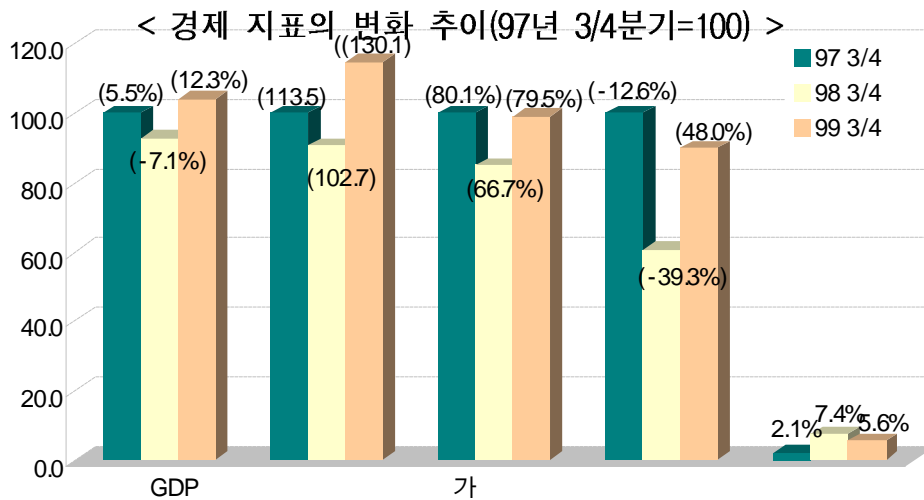
- 수출 호조 지속: 99년 10월 수출이 월별 최고치인 135억 달러(전년대비 27.0%)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 지속. 그에 따라 경상수지도 96년 230억 달러 적자, 97년 82억 달러 적자에서 98년에는 405억 달러 흑자로 전환하는 등 호조세 지속
- 원화 환율의 안정: 97년 12월 24일 달러당 1,964.8원까지 상승했으나, 지속적인 하

락세를 보이며 99년 11월 23일 현재 1,173원 기록

- 대외신인도의 개선: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으로 조정되면서, 외평채 가산 금리도 98년 후반의 10%대에서 99년 11월 후반에는 1%대에 진입함

- 금리 안정화,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경기 침체 해소

- 경제 성장률 회복: 97년 5% 수준이었던 GDP성장률이 IMF체제 초기 긴축 정책으로 결과 98년에는 -5.8%로 급락했으나, 저금리·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정책을 전환한 이후 소비 및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률도 상승. 특히 99년 3/4분기에 12.3% 성장해 97년도 3/4분기의 GDP 수준을 회복
- 산업 생산 증가: 97년 5.3%에서 98년 -7.3%로 크게 하락했던 산업 생산도 99년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3/4분기에 26.79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¹⁾. 한편 제조업 가동률도 98년 60%대에서 99년 9월 현재 80%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음



주: () 안의 숫자중 실질 GDP, 설비투자는 증가율, 산업생산지수는 95년 기준 지수, 가동률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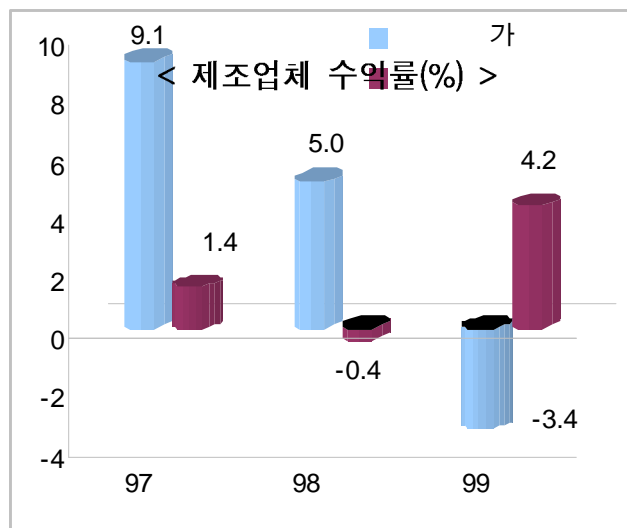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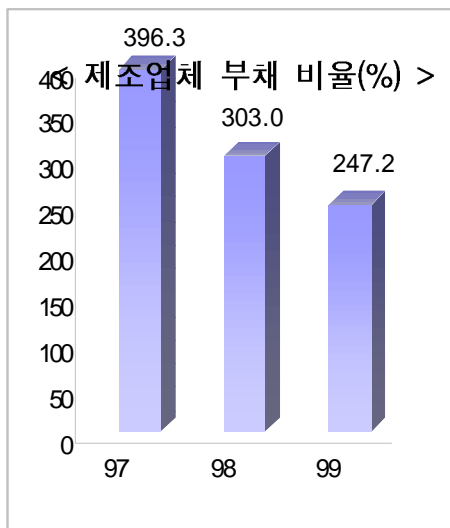
-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 진전

1) 그러나 반도체, 정보통신, 자동차 등 3대 업종의 비중이 높아 경기양극화 현상이 지속. 즉 99년 분기 성장중 이들 3개 업종이 기여한 부분이 41.4%, 제조업 부문 성장에 있어서는 65.7%를 차지

- 금융시장 안정: 금리는 회사채수익률이 97년 말 28.98%까지 폭등했으나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8~9%를 유지하고 있으며, 주가지수도 97,8년의 300~400포인트에서 99년 11월 23일 현재 974포인트로 상승
- 금융 구조조정: 98년 말 은행권의 1차 구조조정 완료 후 모든 은행의 BIS 비율이 10%를 넘어 선진국 금융기관 수준으로 개선되고, 은행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은행이 대형화함
- 새로운 금융 질서 마련: 금융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급진전('과다 은행' 현상의 해소, ABS 시장의 도입, 사후 금융 감독 강화 등)

- 기업의 체질 개선

- 부채 비율 감소: 97년 6월 말 기준으로 396%에 달하던 제조업체의 부채 비율이 99년 6월 말에는 247.2%로 하락함. 특히 5대 그룹의 경우 97년 말 470%에서 99년 6월 말 현재 302%로 크게 감소(자산재평가 포함시 약 235% 정도)
- 수익성 향상: 98~99년의 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매출 실적은 과거보다 부진하지만 경상 이익률은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제고
- 사업구조 개선: 정유, 반도체, 철도차량, 발전설비/선박용 엔진, 항공기, 전자 등 주요 업종의 빅딜이 마무리
- 기업 지배구조 개선: 사외이사제, 소수주주권 강화, 집중투표제 등 지배구조 선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

- 노동 시장의 유연화

- 정리해고 법제화: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
- 고용형태 다양화: 단시간 근로제 및 파견근로제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노사정 합의 도출: 정리해고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의 틀 마련
- 사회안전망 구축: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에서 마련하여 사회 불안정의 가능성 예방

문제점

- 성장 잠재력 약화

- 설비 투자 부진: 98년 설비 투자는 전년보다 38.5%나 감소했다가 99년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, 실제 투자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미흡함(99년 3/4분기 설비 투자는 98년 3/4분기에 비해 48% 증가했으나, 97년 같은 기간 규모의 90% 정도에 불과함)
- 성장 잠재력 약화: 더구나 설비 투자 증가가 주로 반도체, 통신기기 등 특정 산업에 치우치고 있으며 투자의 내용도 기계류보다는 운수장비 부문에 편중됨. 이러한 투자 위축은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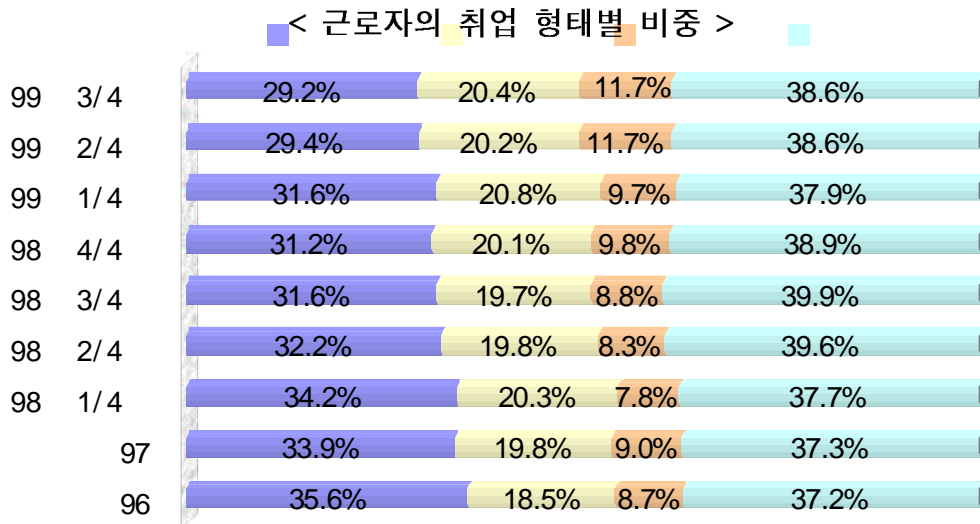
- 사회 통합력 약화

- 실업 증가: 99년 초 180만 명에 육박하던 실업자가 경기 회복에 힘입어 100만 명 대로 줄어들고 실업률도 4.8%로 하락했지만, 이는 97년 말 2.6%에 비해 높은 수

2) 한국은행의 「잠재GDP 및 인플레이션 압력 추정 결과」(11.8)에 따르면 90년대 6~7% 수준을 유지하던 잠재GDP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과 구조조정에 따른 자연실업률의 상승으로 8~99년중 4%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

준이고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5%대로 상승 가능

- 고용 불안정성 확대: 97년 33.9%를 차지하던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99년 3/4분기 중에는 29.2%로 하락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고용 불안이 심화. 더구나 99년 3/4분기에 실업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실업자는 전년보다 28.8% 감소하고 신규실업자도 26.5% 감소한 반면 실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8.8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2.9%나 증가



- 소득 격차 심화: 도시 근로자 가구 중 하위 10%의 평균 소득 대비 상위 10%의 평균 소득 비율이 IMF 체제 이전인 97년의 8배 수준에서 98년 9.4배, 99년 1/4분기 중에는 10.2배로 격차가 날로 증가

- 국가 채무 증대

- 국가 채무 GDP의 23%대 진입: IMF 기준 국가 채무가 97년 65조 6,000억 원 (GDP 대비 14.4%), 98년 87조 6,000억 원(GDP 대비 19.5%)에서 99년에는 111조 8,000억 원(GDP의 23%)이 될 것으로 전망
- 재정 운영 여건 악화: OECD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평균인 GDP의 약 70%에 비하면 1/3 수준에 불과하지만, 한번 늘어난 국가채무는 줄이기 어렵고, 재정 운영에

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

- **금융시장 불안 상존**

-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: 워크아웃 대상인 26개 대기업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가 32조 6,780억 원에 달하여 기업 워크아웃 진전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대출이나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 높음
- 공적 자금의 고갈 위험: 제일 및 서울 은행에 이어 대한생명 등에의 공적 자금의 대규모 투입에 따라, 여타 부실채권의 매입 여력은 더욱 감소
- 금융경색 재발 가능성 상존: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가 지연되고, 대우 사태 이후 투신권의 부실규모가 급증. 금년 말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실시되면 금융권 부실채권이 13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

- **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(대기업의 경쟁력 강화) 상실**

- 경쟁력 강화와 괴리: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 몸집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,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상실
- 비시장적 정책: 구조조정의 긴급성 등을 내세워 비시장적 방식(빅딜 등)을 구사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존중이라는 정책의 기본 철학과 상치
- 기업 자율성 저해: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기업 경영에 대한 감독·통제 기능 강화에 치중하고 모든 기업에 동일한 유형의 기업 지배구조를 강제함으로써 자율성을 저해

향후 정책 과제

- **투자 회복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시장 안정화**

-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,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의 표출과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금리정책의 필요성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³⁾

3) 즉,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생산 Gap(실제 GDP성장률- 잠재 GDP성장률)이 98년 2/4분기 -9%대에 달하였으나 99년 2/4분기에는 실물경제의 회복에 따라 -4.2%로 축소되어 인플레이션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. 하지만 99년 중반 이후의 성장률 상승이 지난해의 하락세에 대한 반동이라는 점과 계절조정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3%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

- 그러나 한은의 주장과는 달리, 경제 전체의 총공급 능력은 한계에 달하지 않았으며, 인플레이션 압력은 油價,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주로 비용 측면에서 발생할 것임. 따라서 선제적 긴축 정책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초래하여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이게 됨
- 실물 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에 힘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,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의 금융 비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자본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져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고도 설비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

- 구조조정 추진 방식의 개선

- 무엇보다 경기 회복과 조화롭게 추진되고 민간 자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,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
-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 요건의 완화, 금융기관 부채의 출자 전환 허용, 정리 해고의 원칙 관철 등 여건의 창출이 필요
- 금융 부문은 신용 평가 능력 및 여신 심사 기능 등 소프트웨어적 능력의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임. 그리고 부실 금융 기관의 조속 처리와 제2 금융권의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
- 공공 부문은 전문화를 통한 정부 조직의 정비, 개방형 임용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
- 노동 부문에서는 일관성 있는 노동 정책의 수행, 원칙있는 노동관계법의 집행, 노사정체제의 복원이 필요하며, 궁극적으로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창출이 요구됨

- 고용 불안 해소 및 중산층의 강화

- 극히 불안한 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일거리가 소멸될 경우 실업률 재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. 또한 상대적으

로 과잉 상태인 사무직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, 장기 실업자 증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핵심적인 실업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

- 더구나 소득 편차 심화로 중산층의 약화가 지속될 경우 내수 침체 지속, 사회구조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 불안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임
-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산업이나 직종으로의 이동을 원활히 하도록 직업 훈련 체계 및 직업 안전망 확충과 아울러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, 공평 과세를 위한 조세 체계의 개혁 등 구조적·제도적 개선 노력, 사교육비 절감 등 중산층의 생활비용 부담 완화 정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

- 장기 비전(특히 산업 정책) 설정의 필요

-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, 기업, 공공 부문의 장기 발전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임. 즉 과거 잘못된 점에 대한 청산 작업은 진행 중이지만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 부족함
- 특히 장기적인 산업 정책의 부재라는 점에서 심각함. 실은 기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는 장기적인 산업 정책에 입각한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귀결되어야 함
-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산업 포트폴리오 청사진이 있어야 함. 다음으로는 벤처기업, 중소기업, 대기업이 각기 경쟁 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

(bcpark@hri.co.kr ☎ 724-4048)